

광주, 인공지능 미래산업...전남, 블루이코노미 육성 집중

광주시·전남도 내년예산 어디에 얼마 쓰나

광주시와 전남도, 양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시·도의회에 넘겨졌다. 의회의 최종 심의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은 확정된 상태다.

◇광주시=민선 7기 광주시가 추진하는 핵심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산업이다. 광주시는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부 예산 426억원 등 502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중심 집적단지조성 사업비 472억원, 인공지능 실무인재양성 혁신교육운영 20억원, 인공지능산업육성지원 5억원, 인공지능대학원 신설지원 2억원, 인공지능네트워크 구축지원 3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빛그린산단에 들어설 완성차 공장으로 대표되는 광주형일자리 사업 성공 및 노사상생도시 실현에도 적잖은 예산을 투입한다.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98억원,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5억원, 산학융합지구조성 20억원, 빛그린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 40억원, 노동인권회관 건립 20억원, 노사상생 프로그램 운영지원 2억원 등 274억원을 편성했다.

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인 11대 미래산업 육성에 8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친환경자동차산업 339억원,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37억원, 광융합산업 25억원, 에너지 및 수소산업 41억원,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 46억원, 드론산업 등 10억원, 문화콘텐츠산업 219억원, 관광산업 28억원, 김치 및 음식산업 13억원 등이다.

광주시는 주목할 만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광주청년드림수당을 꼽았다. 청년 실업문제로 고통받는 지역 청년 1200명에게 월 5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으로 최종학교 졸업한지 2년이 넘어야 한다. 내년 초 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대상자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융섭 광주시장 공약인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신설 및 운영 예산에 9억원이 편성됐다.

예산낭비 지적에도 광주시는 광주 대표 애플단지

시, AI 산업 502억·광주형일자리 274억

청년 1200명 5개월간 50만원씩 지원

도, 에너지 등 6개 프로젝트에 990억

농림·해양수산 분야 올보다 17% 늘려

시설로 지목받은 광주김치타운에 61억원을 추가 투입하려던 기존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 광주김치타운과 맞닿은 남구 입암동(호천지구) 380번지 일원 2만1317㎡(6450평)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들이는 데만 3년간 총 2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광주시가 계약금 등 1차분 61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광주시의원들이 제목소리를 내지 주목된다.

◇전남도=전남의 핵심 프로젝트인 '블루 이코노미' (Blue Economy)는 전남의 풍부한 블루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성장 축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도 에너지·투어·바이오·트랜스포트(Transport·수송)·농수산·시티 등 6개 프로젝트 55개(자체사업 38개) 사업에 국비를 포함해 990억원을 편성했다.

당장, 전남을 운송기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블루 트랜스포트' 프로젝트의 경우 ▲e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95억6600만원) ▲초소형전기자 산업육성 서비스 실증(59억원) ▲드론 기업지원 기반구축 및 실증 사업(27억6500만원) ▲수소연료전지차(29억6000만원) 등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예산 편성도 두드러진다. 내년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올해(1조2548억원)보다 17.1%가 증가한 1조 4698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584억원을 편성, 전남지역 농·어민들에게 상·하반기로 나눠 60만원이 지급되고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지원비로 올해(10억)보다 늘어난 30억원을 편성했다. 어촌뉴딜 300사업도 올해(851억)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612억원으로 늘렸고 지방어항 건설지원(174억원) 등도 추진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 진정한 변화 만들어내겠다”

임기 후반기 첫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이 더 중요해졌다”며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후반기 국정운영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께 더 낫고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국민의 격려·질책 모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국민 지지가 힘”이라며 “국민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변화를 확실하게 체감할 때까지 일관성을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은 우리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살리는 확실한 변화를 일궈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포용은 끝이 없는 과제”라며 “지급의 성과와 변화에 머물지 말고 심각한 양극화·불

평등이 해소되고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공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제도도 숨겨진 특권·불공정까지 바로잡아 누구나 공평한 기회·과정을 가지도록 사회 전 분야에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라며 “우리에게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다. 평화·번영의 새로운 한반도가 열릴 때까지 변함없는 의지로 담대하게 나아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빨라지는 개각 시계...법무장관 검증 임박 속李총리 거취 촉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에 대한 검증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가운데 연말·연초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일부 장관들의 교체 가능성이 부상하는 등 집권 후반기 '개각 시계'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11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윤곽이 조만간 가시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본격적인 검증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차기 법무장관 인선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검찰개혁 법안 등이) 입법될지 관심이어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차기 법무장관 인사 발표는 내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시기와 맞물려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인사검증에 2~3주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후보자 검증에

나설 시점이라는 것이다.

후보군으로는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는 관측이 많다. 인사청문회를 돌파하는 데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당 내에서는 과거 민정수석 경험을 갖춘 전혜철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꾸준히 흘러나온다. 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개혁법안 처리가 마무리된 뒤에 법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의 입각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온다. 또 같은 판사 출신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법무장관 '원포인트' 인선 이후로 예상되는 '총선 개각'에도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총리가 여의도로 복귀한다면 총선 판도에 적지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은 지난 10일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총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공직 사퇴사한(내년 1월 16일) 이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결국 개각을 한다면 이른내달,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개각 시계'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진표·원혜영 의원 등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개각이 현실화 될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높아진 검증기준 등을 고려하면 입각하기 적절한 인물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은데다 총선을 앞두고 청문회 정국이 펼쳐지는 것은 여당으로서도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교육청 2조2000억·전남교육청 3조8000억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도의회 제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으로 각각 2조2000억원, 3조8000억원대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11일 2020년 예산안으로 2조2372억원을 책정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분예산보다 893억원(4.2%) 늘었다.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7987억원, 지자체 이전수입 3699억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10억원, 자체 수입 176억원이다. 올해 하반기 고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내년에 2학년까지 확대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505억원을 확보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질 향상, 유치원 무상급식에 1827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식자재비 지원 단가를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한다.

도교육청도 올해보다 339억원(0.9%) 증가한 3조8732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3680억원, 지자체와 기타 이전수입 3816억원, 자체 수입 303억원, 전년도 이월금 933억원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교육력·학력 향상 523억원, 학교 환경 구축 4956억원,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2415억원, 미래 교육 기반 구축 816억원, 참여협력 거버넌스 구축 71억원 등 사업비를 확보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초청 매직 갈라쇼

세상의 모든 매직

전유성과 5인의 마술사들

김민형 김정우 김치 김현수 홍성훈

일시 | 2019년 11월 12일(화) 저녁 7시 장소 | 광주 상무지구 라마다호텔